

태안기름유출 사고대응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1. 개 요

- 일시 및 장소 : '07. 12. 20.(16:00~18:40),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 제종길(국회의원), 황경엽(KIST 박사), 장기욱(변호사), 표도르 세르게예비치(김용화, 배재대 교수), 이성규(안전성평가연구소 박사), 충청남도 관계자,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진 등 30명
- 내 용
 - 태안기름유출사고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협력 대응 방향(국회의원 제종길)
 - 기름오염 해안지역 환경복원 방향(KIST 박사 황경엽)
 - 해양환경생태 피해규모 산정과 배상방향(변호사 장기욱)
 - 태안기름유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차원의 대응방법에 대한 발표와 토론

2. 주요내용

□ 태안기름유출사고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협력대응 방향(제종길)

- 이번 사고뿐만이 아닌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사고 대응에 대한 국가적인 계획 필요
- 국가별로 유류오염방제연구소 운영중
- 지자체 차원에서 방제우선순위 결정
- 보상과 복구를 위한 지방차원의 기준 필요
- 사고 직후 여러기관의 자의적인 연구가 있으나 지속적인 연구 필요
- 질의답변

질의1) 특별조치법 제정의 필요와 국회통과 가능성 있는지?

답변1) 기본적으로 특별법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빠른 보상과 복구를 위해서 단기간이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은 가능함.

질의2)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복구에만 신경쓰는 사이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질의3) 지방차원의 생태조사 기준, 역할분담, 매뉴얼이 없다. 국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답변3)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충청남도에 건의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매뉴얼 작성하여 해결가능

질의4) 피해 발생 후 환경복원과 배상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복원완료 상태의 평가기준(타임리밋 등)을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인가?

답변4) 타임 리밋은 기계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고려할 필요가 없다.

□ 태안반도 유류오염 방제 방안(황경엽)

- 원유의 성질, 원유 유출에 따른 방제, 세척 공정, 누출사례, 유해화학물질 추적관리 방안 설명
- 기름에 오염된 토양을 물세척으로 정화한 사례가 있음(의왕시)
- 기름오염 바위주변에 오일펜스를 친 다음 고압분사기로 세척제거하고 바닥은 흡착재로 유분을 제거함
- 모래지역은 썰레질로 유분함유 토양을 교반한 후 흡착재로 제거함

□ 태안원유방제 방법 제안(김용화)

- 원유 찌꺼기에는 멜캅탄이라는 물질이 있어 신경마비를 일으키므로 자원봉사시 어린이 동참하지 말 것
- 현재 방제 작업은 돌에 원유를 흡수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비효율적이므로 기름찌꺼기에 노출된 돌을 50~60℃ 가성소다 혼합물에 담가 대량으로

세척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1993~98년에 걸쳐 바다 속의 가라앉은 유분은 알킬류의 크실렌 종류가 생태독성이 커서 박테리아에 유해성이 큼

- 질의답변

질의1) 이 방법을 어디까지 적용가능한가?

답변1) 숨구멍이 없는 바닷모래에는 부적합하며, 돌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질의2) 가성소다를 사용하는 방식이 2차 오염을 유발하지는 않는가?

답변2) 돌을 닦아내는 방식은 돌의 숨구멍을 막아 미생물의 번식을 막는다.
하지만 가성소다를 사용하는 방법은 그런 우려가 없으므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해양환경생태 피해규모 산정과 배상방향(장기욱)

-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 필요
-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바뀐 듯한 배상체계는 옳지 못하다
- 배상의 범위에 대한 생각 발표
- 질의답변

질의1) 어장피해가 아닌 기타 업종의 피해에 대해 지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답변1)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확인자로서 증빙자료의 작성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질의2)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듯한 입장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답변2) 그것이 위자료로 판례가 있다. 그동안의 판례로 보아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액수는 별도의 문제이다. 입증하기가 어렵다. 입증만 된다면 배상이 가능하다.

질의3) 배상의 경우 수산과 비수산 분야로 나눌 수 있는가?

답변3) 통합적이고 연쇄적인 피해이므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보상은 있을 수 없다.

질의4) 태안지역지원특별법 문안에 피해배상의 종류를 어떤 식으로 나누어야 할 것인가.

답변4) 어업피해, 그 이외의 경제적 생활에 따른 피해, 정신적 손실, 기타 손실피해로 나누고 각 항목별로 적법과 위법의 성격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질의5) 지역경제와 환경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 소송이 가능한가?

답변5) 국가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는 없으나, 현재 판례의 성향은 환경적인 부분, 무형적인 부분에 피해배상을 해주는 편이다.